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¹⁾

요 약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유출을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이 지역에 유입된 이후 장기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편적인 유입 확대 정책은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복 이동과 수도권 회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청년의 반복 이동이 경제적 성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초기 유입 이후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 개입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일(Work)-삶(Life)-락(Fun)-연(Engagement)’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청년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청년친화지수’를 제시하였다. 청년친화지수에 기반한 지역 유형 구분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산업 기반은 있으나 정주환경이 취약한 ‘청년 경유지’에는 직주근접형 주거·교통·생활SOC를 결합한 고용-정주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문화 기반은 갖추었으나 일자리가 부족한 ‘정착유보지’에는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경제적·문화적 기반이 모두 취약한 ‘청년 유출지’는 지역사회의 강한 유대감을 경제적 기회와 결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착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청년을 붙잡는 정책이 아니라 이동과 경험을 전제로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여건 및 청년의 복합적 수요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 접근과 지속적인 점검·보완 체계가 마련될 때, 청년의 이동 경험은 지역 소멸의 원인이 아닌 지역 혁신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1) 김지수 외(2025),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일-삶-락-연 기반의 청년친화지수와 정책 방향」을 요약·보완하였음.

1. 서론

비수도권 유출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은 2015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2018년부터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생산능력과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순유출은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과 지역 불균형 심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다시 떠나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기대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지역 이미지는 추가적인 청년인구 유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지역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인구를 양적으로 많이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며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 이동에 대해 ‘정주’ 개념을 고려한 동태적 시각에서의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을 경제적·사회문화적·정서적 기반이 단계적으로 확보되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청년 정착 선순환 메커니즘’이라는 구조적 틀과 이에 기반한 ‘청년친화지수’를 제시한다. 청년 정착 선순환 메커니즘은 청년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된 이후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강화해 가는 과정을 일련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며, ‘일(Work)→삶(Life)→락(Fun)→연(Engagement)’이라는 네 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청년정책을 단순한 유입 확대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 접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2. 청년층의 지역 이동 패턴과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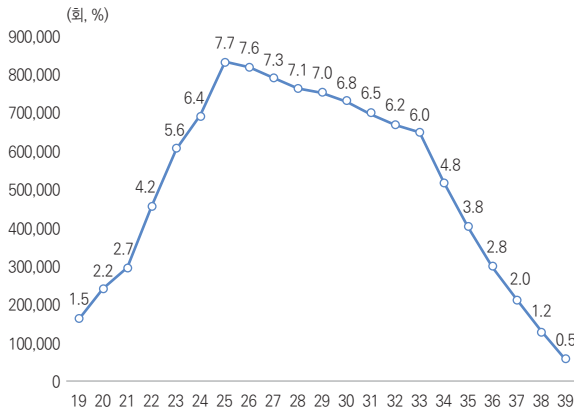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국내 청년(만 19~39세)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미시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²⁾, 청년층의

거주지 이동 패턴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거주지 이동은 대학 입학과 첫 직장 진입 등이 집중되는 20대 초중반과 결혼·출산 등을 경험

2) 최근 졸업 및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청년층의 기준을 만 19세~39세로 정의하였다. 지역 간 이동은 시군구 간의 경계를 넘는

이동으로 정의하였는데 최근 지방소멸 이슈가 시군구 단위에서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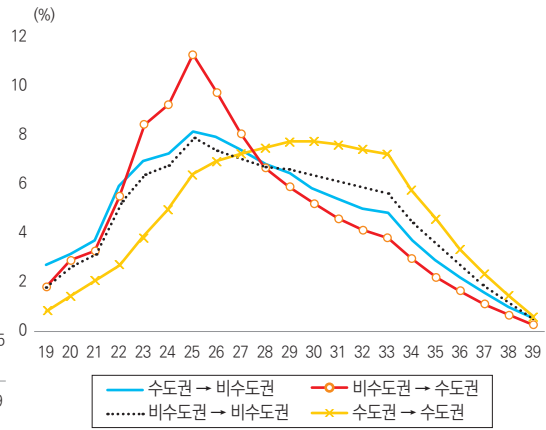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별 이동 횟수의 분포



자료: 김지수 외(2025).

주: X축은 연령을 Y축은 각 연령대별 이동 횟수를 나타내며, 수치는 총이동 빈도 중 연령대별 비중을 나타냄.

〈그림 2〉 이동 유형의 연령별 분포



자료: 김지수 외(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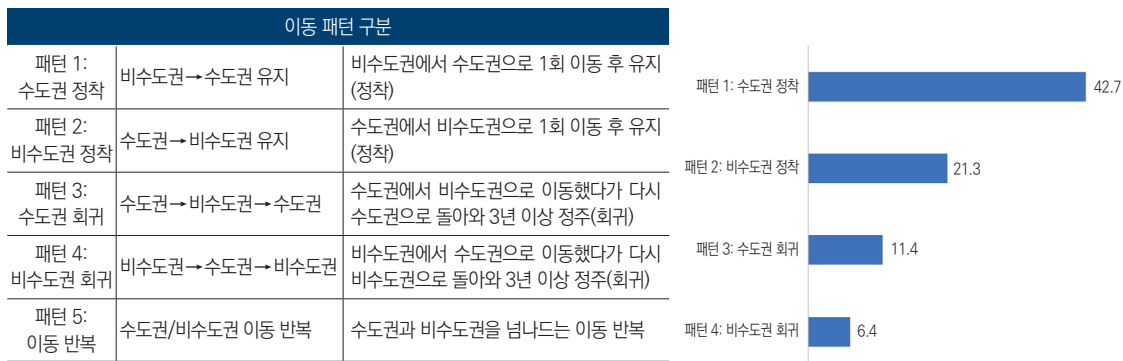
하는 30대 초중반 등 생애주기별 전환점에서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30대 중반 이후 청년층 이동은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데, 해당 연령대를 전후로 직장 정착 및 결혼 등으로 인해 생애주기가 변화하면서 현 거주지에 정착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동은 20대 중반에 집중된 반면, 30대로 갈수록 수도권 내 이동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20대 초중반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과 탐색을 반복하다가 정착기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수도권에 정착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계를 넘는 이동 패턴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후 수도권에 계속 머무는 패턴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패턴 1).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후 비수도권에 정착하는 패턴은 21.3%로, 패턴 1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패턴 2). 한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였으나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한 비중이 11.4%(패턴 3), 반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비수도권으로 회귀하는 비중은 6.4%에 불과하다(패턴 4).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은 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려는 경향이 높은 가운데,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세명 중 한 명이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이동 후 유지하는 패턴(패턴 1, 2)의 경우 대체로 충청권과 수도권 간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분석기간 동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청년(패턴 1)의 30.3%는 충청권에서, 21.3%는 동남권에서 왔으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유지한 청년(패턴 2)의 38.4%는 충청권에 정착하였다. 한편 회귀 패턴의 경우 이동한 지역에서 머문 기간은 1~2년 남짓으로 짧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으로 갔던 청년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를 결정하기까지 비수도권에 머문 기간은 평균 1.6년으로

〈그림 3〉 청년의 지역 이동 패턴과 비중



자료: 김지수 외(20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비수도권 회귀 청년이 수도권에 머문 평균 기간이 2.6년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수도권으로의 회귀 결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회귀 패턴의 절반 이상은 기존 지역과 동일한 시군구 혹은 인근의 동일한 노동시장권을 선택한다. 특히 수도권 회귀는 기존 거주지와 동일한 노동시장권에 속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비중이 30% 이상인데, 대체로 노동시장의 규모가 크고 노동여건이 좋은 대도시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서울권, 경기남부권 등). 익숙함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와 선택지를 찾아 이동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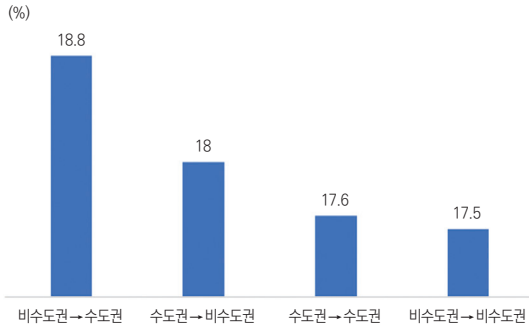
종합하면 이동의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관측되며,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더라도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고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반대의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기회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5명 중 1명은 실질소

득의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이 이동 후 실질소득 개선을 경험한 비중은 18.8%로, 여타 이동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이다. 문제는 청년층의 반복 이동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기회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3회 이동까지는 소득 증가율이 확대되지만 이후 이동이 반복되면서 소득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반복되는 이동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직장 경력이 짧아지고 네트워크의 단절 등이 발생하면서 더 나은 직장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년들이 반복적 이동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일자리에서 주거, 교통, 문화, 관계 형성 등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친화지수 산출 결과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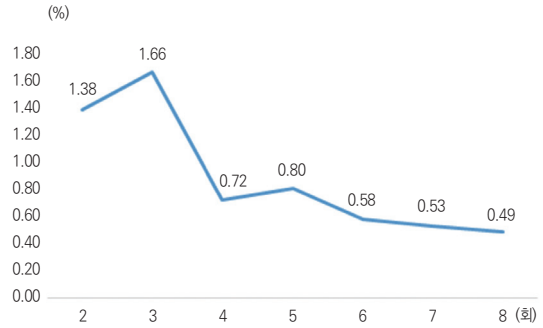
〈그림 4〉 지역 이동 전후의 소득 변화



자료: 김지수 외(20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이동 유형별로 이동 이후 실질소득 구간이 개선된 청년 비중을 나타냄.

〈그림 5〉 이동 횟수에 따른 소득 증가율 변화



자료: 자료: 김지수 외(2025).

주: 2회 이상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청년을 대상으로, 이전 이동 시점 대비 실질소득 변화율을 산출한 결과임.

3.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선순환 요소와 청년친화지수

(1) 청년 정착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청년친화지수 산출

본고에서는 청년이 지역 내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적 활력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청년친화지수’를 산출한다. 청년친화지수의 기본 틀은 청년 정착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메커니즘은 ‘일자리(Work)→삶(Life)→락(Fun)→연(Engagement)’으로 이어지는 네 개의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가 있어도 주거와 생활 기반이 불안정하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주거가 안정되어도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하면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정착 선순환 메커니즘에서 청년친화

지수는 단순한 경제·고용 지표를 넘어 청년이 체감하는 실질적 삶의 질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두며,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측정하는 ‘일자리 부문’, 둘째, 주거·복지·건강 등 생활 안정 요소를 측정하는 ‘삶 부문’, 셋째,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과 활력을 반영하는 ‘락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정책 참여 기회 등을 측정하는 ‘연 부문’이다.³⁾

청년친화지수 결과를 토대로 229개 시군구를 청년선호지역(상위 10%), 청년매력지역(상위

3) 일자리 부문은 첨단산업 집적 정도와 산업구조 다양성, 청년평균임금 등 지역 일자리의 양과 질을 파악할 수 있는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삶 부문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교통 접근성, 주거환경 만족도 등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13개 지표, 락 부문은 청년 상권, 쇼핑·공연시설 등 6개 지표, 연 부문은 지역소속감, 청년의 참여권리 사업 예산 등 4개 지표로 구성된다. 청년친화지수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지수 외(2025),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일-삶-락-연 기반의 청년친화지수와 정책 방향」 참고.

〈표 1〉 청년친화지수 상위 10% 지역

순위	종합지수	4대 부문			
		일자리	삶	락	연
1	경기 화성시	충남 천안시	경기 수원시	서울 중구	전남 영광군
2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서울 중구	부산 중구	부산 중구
3	충남 천안시	경기 화성시	경기 광명시	대구 중구	대전 서구
4	서울 중구	경남 진주시	대구 중구	서울 종로구	경기 군포시
5	경기 안산시	경기 성남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구로구	경남 거제시
6	경기 성남시	경남 김해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 광진구	부산 부산진구
7	경기 시흥시	경기 시흥시	경기 부천시	서울 마포구	전남 무안군
8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부산 동래구	서울 동대문구	경남 창원시
9	인천 미추홀구	경기 수원시	대구 수성구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10	서울 강남구	충북 청주시	서울 강남구	서울 영등포구	광주 서구
11	인천 남동구	경북 포항시	대구 달서구	서울 동작구	인천 강화군
12	서울 금천구	서울 금천구	경기 고양시	서울 양천구	경남 김해시
13	경기 안양시	경기 부천시	부산 수영구	서울 중랑구	경기 수원시
14	서울 영등포구	전북 전주시	대구 동구	서울 금천구	인천 남동구
15	경기 고양시	경기 안양시	부산 연제구	인천 부평구	전남 순천시
16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서울 강남구	전북 완주군
17	서울 구로구	경기 김포시	인천 연수구	서울 강동구	제주 제주시
18	충북 청주시	인천 남동구	서울 양천구	서울 성동구	경남 양산시
19	경남 진주시	서울 강남구	부산 동구	서울 송파구	경남 고성군
20	인천 서구	서울 영등포구	대전 서구	서울 용산구	경남 사천시
21	경기 용인시	경기 고양시	서울 영등포구	인천 동구	경남 통영시
22	서울 마포구	서울 중구	대전 동구	서울 서대문구	대구 남구
23	경남 김해시	인천 서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부천시	인천 서구

자료: 김지수 외(20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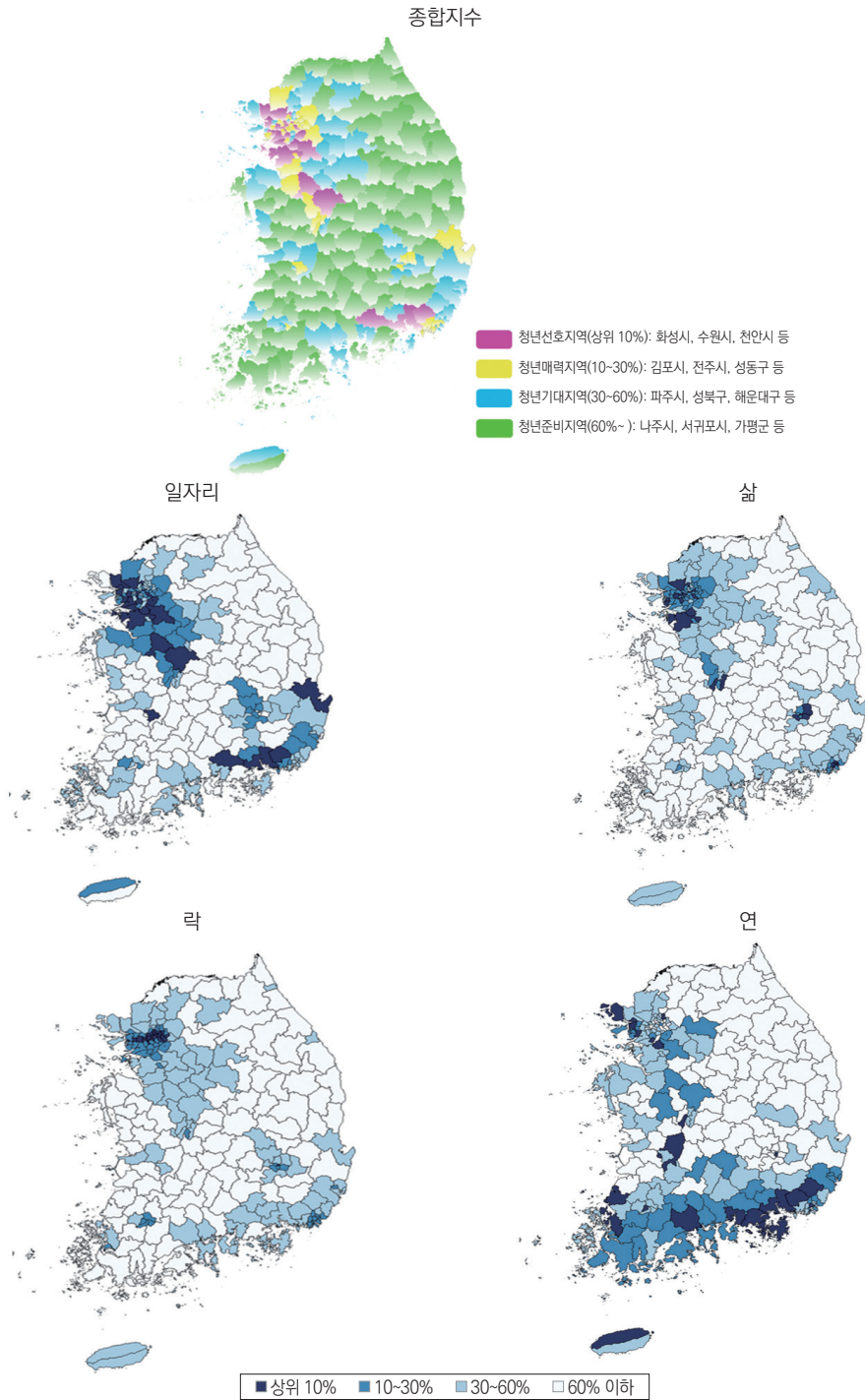
주: 종합 및 부문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23개 지역 표시.

10~30%), 청년기대지역(상위 30~60%), 청년준비지역(하위 40%)으로 구분하였다. 상위권에 속하는 청년선호지역과 청년매력지역은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환경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 상위 10% 중 비수도권은 4개 지역에 불과하며, 주로 거점형 도시(천안 3위, 창원 16위, 진주 19위, 김해 23위 등) 위주이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

역은 청년친화적 기반이 다소 취약한 청년기대지역과 청년준비지역에 해당하며, 특히 청년준비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친화 환경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보여주며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친화지수를 구성하는 4개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일자리

〈그림 6〉 청년친화지수의 지역별 분포



자료: 김지수 외(20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기회를 반영하는 ‘일자리’ 지수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안산시(2위)·화성시(3위)·성남시(5위)·시흥시(7위)·수원시(9위) 등 제조업 기반 위성도시에서 높게 나타나며, 해당 지역들은 대기업과 첨단제조, 산업단지 연계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천안시(1위)·김해시(6위)·창원시(8위)·포항시(11위) 등 전통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추어진 산업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지수가 높은 반면, 곡성군·순창군·영동군 등 농촌·산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고용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좋은 일자리 기회가 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구조적 격차를 뚜렷이 보여준다.

다음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성과 일상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삶’ 지수는 수원시(1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어 서울 중구(2위), 광명시(3위) 등이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삶 지수는 인구밀도 및 도시화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지역과 농산어촌에 해당하는 지역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포를 보면 청년 100명 중 60명 이상에게 공급 가능한 지역은 주로 경기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문인 ‘락’은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 인프라를 반영하는데, 4대 부문 중 수도권의 편중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 중 단 두 곳(부산 중구·대구 중구)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해당하며, 특히 서울의 자치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국 스타벅스 매장과 팝업 스토어의 분포이다. 스타벅스는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많은 유동인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청년층 상권의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스타벅스의 분포는 서울 강남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매장이 한 곳도 없거나 소수인 지역이 상당수이다. 체험 중심 소비를 중시하는 청년층의 새로운 문화트렌드인 팝업스토어 또한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⁴⁾ 이는 청년 문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소속감이나 정책 참여 기회 등을 고려한 ‘연’ 지수는 앞서 일, 삶, 락 지수와는 다르게 비수도권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광군(1위), 거제시(5위), 무안군(7위) 등 농어촌 및 지방 중소·중견 도시에서 연 지수가 높은 데 비해, 상위 10% 내 수도권은 군포시(4위), 노원구(9위) 등 6개 지역에 불과하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집, 내 동네’라는 심리적 기반과 사회적 관계 형성은 청년들의 장기 정착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이 가진 강점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기회나 삶·락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채 연 부문만 높을 경우 청년의 유입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자칫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지역사회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문

4) 2024년 기준 전국 팝업스토어의 50%는 서울 성동구·영등포구·송파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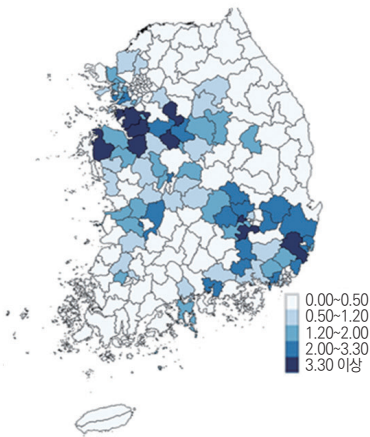
과의 보완적 발전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청년친화지수는 산업과 문화, 생활 인프라가 고루 갖추어진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수도권은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을 나타내는 연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익명성과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한 정주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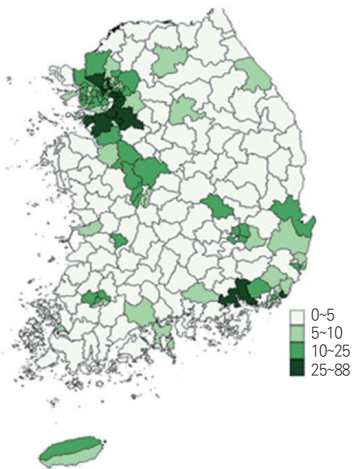
성의 한계가 우려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거점 도시에 집중된 일자리 구조를 보이며, 수도권과 비교해 연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다. 다만 생활·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는 삶의 질과 정서적 만족 측면에서 정주 매력도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림 7〉 청년친화지수 부문별 주요 지표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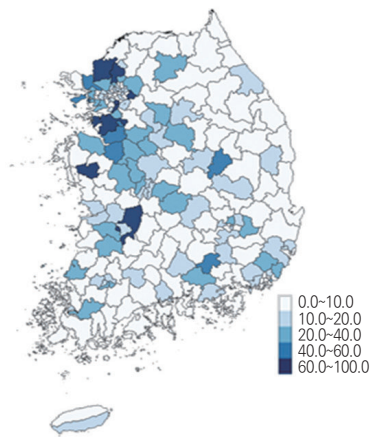
일: 첨단산업의 집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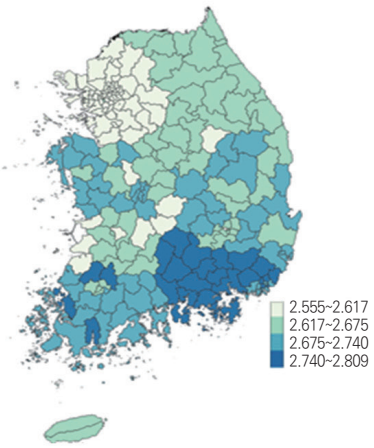
락: 전국 스타벅스 분포로 본 청년 상권



삶: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연: 지역에서 느끼는 소속감



자료: 김지수 외(2025).

주: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청년 백 명당 공급량을 나타내며, 지역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20대 평균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감이 높음을 의미.

(2) 청년친화지수를 이용한 유형 구분과 특징

청년친화지수를 구성하는 부문별 분포를 토대로 229개 시군구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일자리와 생활·문화 기반이 모두 우수한 ‘청년 정착지(Settlement Zone)’이다. 일자리와 삶·락·연이 모두 평균 이상인 지역으로서 대부분 수도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유형은 성공모델 공유를 통해 정책 사례 확산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 시,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부터 일 지수와 삶·락 지수 모두 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은 ‘청년 유출지(Departure Zone)’로 구분된다. 해당 유형은 경제활동이나 문화요소 등 청년들을 머무르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취약하여 청년층의 빠른 이탈이 우려되며,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 유출지 유형에 속하는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연 부문은 우수한 편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기회나 사회문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면 자칫 폐쇄적인 지역사회로 고립될 우려가 있다. 지역에 기형성된 강한 유대감으로 인해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는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활동이 경제적 기회와 연결되어 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기회를 결합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창출형 비즈니스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 시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 아이템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 멘토링과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기부 및 실적 강제화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 경유지(Transit Zone)’는 일자리

〈표 2〉 청년친화지수를 이용한 네 가지 유형 구분과 특징

청년 경유지(Transit Zone)	청년 정착지(Settlement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 삶·락 ↓, 연 ↓ ·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청년의 체류 기간이 짧고 순환이 빠른 노동 시장 구조 ⇒ 산업 기반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청년정주환경 조성 ·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충남 아산 등 전통 제조업 집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 삶·락 ↑, 연 ↑ · 일자리와 생활·문화 기반 우수 ⇒ 성공모델 공유 통한 정책 사례 확산 · 경기 화성, 경기 수원, 충남 천안, 서울 중구, 경기 안산,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지역 중심
청년 유출지(Departure Zone)	청년 정착유보지(Hesitation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 삶·락 ↓, 연 ↑ · 경제적 기회와 사회문화 인프라 부족 ⇒ 지역관계를 활용한 일자리 확충 통해 청년 유입 유도,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단계적 정착 · 전남 나주, 제주 서귀포시, 충남 홍성 등 대부분의 청년준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 삶·락 ↑, 연 ↑ · 생활·문화 기반 대비 고용 기반이 취약 ⇒ 문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유입 요인 강화 · 서울 성북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중구, 광주 서구 등

자료: 김지수 외(2025).

부문은 평균 이상이나 삶과 락 부문이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서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충남 아산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가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년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와 경력 형성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주거 안정성과 문화·여가 인프라, 대중교통 접근성, 커뮤니티 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징을 보인다. 청년 경유지형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기반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청년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정주 패키지형 정책을 통해 청년의 유입이 정착으로 완성되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단지 인근에 청년 맞춤형 정주지구를 조성하고, 주거·교통·생활SOC·문화 인프라를 통합 공급하는 방식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산단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라스트마일 교통 수단의 강화와 주거-근로-생활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의 공급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근속기간과 연계한 주거지원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청년의 장기근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도모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정착유보지(Hesitation Zone)'는 일 지수는 평균 이하이지만, 삶·락 지수는 평균 이상인 유형이다. 생활·문화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정착 잠재력은 높지만 일자리가 취약해 청년들이 망설이는 지역으로서, 해당 유형은 문화여가 인프라나 주거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도 이것이 일자리와 연결되지 못하면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착유보지'를 '정착지'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요 문화사업의 일정 비중을 청년 주도로 추진하고, 청년 창작자와 지역 소상공인이 연합한 팝업 스토어 운영을 통해 청년 문화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 내 문화 관련 기관과 연계한 청년 인턴십의 확대와 프로젝트 협업 기회 발굴을 통해 청년들이 문화 관련 일 경험을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지역 이동과 정착에 대한 청년층의 경험과 인식 조사

청년층 8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이동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년층 지역 이동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일자리 이슈로 파악되었다. 거주하던 지역을 떠난 이유에 대해 일자리·사업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약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주거지 이슈(23.1%),

교육·보육 등 가족 이슈(14.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자리 이슈에 대한 세부 사유로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지역을 떠났다는 응답(21.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20대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30대는 낮은 임금 및 복지 수준 미흡으로 인한 이직·퇴사가 높게 나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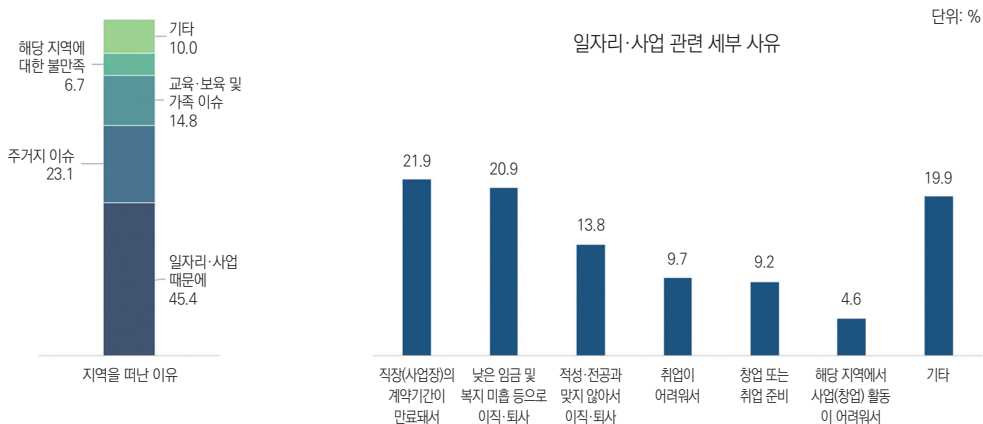
있다. 사회초년생인 20대는 안정적인 직장의 부족 이, 30대는 만족스러운 직장의 부족이 거주지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은 복지·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수도권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성이 지역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외에도 생활·문화 인프라나 물가 등 거주 환경은 청년들의 이동 혹은 정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들은 수도권에 대해 높은 생활비

와 과도한 경쟁, 혼잡한 교통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문화·여가 인프라의 풍요와 다양한 일자리, 생활 편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비수도권은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용과 삶의 여유 등이 장점이나, 일자리 부족과 문화적 기회 제한, 불편한 교통 인프라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청년들이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에 대해 가지는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은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수도권이거나 지역

〈그림 8〉 거주지를 떠난 이유



자료: 김지수 외(2025).

〈표 3〉 일자리 이슈에 대한 지역별·연령대별 세부 사유

	연령대			당시 거주지역	
	20대	30대 초반	30대 중후반	수도권	비수도권
직장 계약기간 만료	27.6	21.1	17.7	29.7	17.2
낮은 임금 및 복지 미흡으로 인한 이직·퇴사	13.8	23.7	24.2	10.8	27.0
적성·전공과 맞지 않아서 이직·퇴사	10.3	15.8	14.5	13.5	13.9
취업이 어려워서	15.5	7.9	6.5	6.8	11.5
창업 또는 취업 준비	12.1	7.9	8.1	12.2	7.4
해당 지역에서 사업·창업 활동 제한적	10.3	2.6	1.6	5.4	4.1
기타	10.3	21.1	27.4	21.6	18.9

자료: 김지수 외(2025).

〈그림 9〉 수도권 거주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키워드



자료: 김지수 외(2025).

“주거비나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다 고려하면 사실 서울에서 받는 월급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_이○○, 20대
 “수도권에서 일할 때는 출퇴근만 세 시간 걸렸어요. 집에 오면 거의 밤이어서 개인 활동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_오○○, 30대

“서울로 올라간 친구들 얘기로는 수도권은 ‘경험의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_김○○, 30대

“문화적인 환경은 서울이 지방보다 1~2년 정도 빠른 거 같아요. 지방에서는 1년 뒤에나 할 팝업스토어나 전시회가 서울에서는 1년 전에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_권○○, 20대

〈그림 10〉 비수도권 거주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키워드



자료: 김지수 외(2025).

“지방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이 없어서 놀랐고,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이라는 점과 막차가 10시에 끊긴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_최○○, 30대

“울산에서 잠시 근무했었는데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이 많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안 되어 있고 놀거리도 없어서 그냥 직장 ‘일터만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_조○○, 30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비수도권은 확실히 교통의 ‘쾌적함’이 있어요. 수도권은 교통은 ‘편리’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고, 주차 한 번 하려면 10~20분 걸리는데, 비수도권은 교통이 엄청 편리하진 않지만 혼잡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_배○○, 30대

〈표 4〉 지역별·연령대별 거주지 선택 이유

단위: %

	당시 거주지역		지역 규모				연령대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	중견 도시	소도시	그 외 소지역	20대	30대 초반	30대 중후반
사례 수	(320)	(480)	(214)	(440)	(116)	(30)	(213)	(258)	(329)
직장 출퇴근이 편리해서	51.6	53.8	50.9	50.9	63.8	53.3	43.7	53.9	58.1
가족·지인이 거주하는 곳이라서	30.3	46.3	32.7	41.1	45.7	50.0	40.4	37.2	41.6
생활 인프라가 마음에 들어서	38.1	24.0	31.3	34.3	14.7	6.7	30.0	28.7	30.1
물가·주거비용이 저렴해서	16.9	21.3	14.0	21.4	21.6	23.3	21.1	18.2	19.5
구직활동이 보다 용이해서	14.7	14.8	20.6	12.0	12.1	23.3	16.4	16.7	12.2
취업 준비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	17.8	13.8	17.8	15.0	14.7	6.7	20.2	16.7	11.2
인근 대도시와 가까워서	18.1	9.6	16.4	12.7	6.0	20.0	17.4	11.6	11.2
지자체 제공 지원프로그램	5.0	3.1	5.6	3.0	4.3	3.3	6.6	3.1	2.7
기타	7.5	13.5	10.7	9.5	17.2	13.3	4.2	14.0	13.4

자료: 김지수 외(2025).

규모가 클수록 생활 기반이나 대도시와의 접근성, 취업·자기계발을 위한 인프라 등이 주요한 고려사항이며, 비수도권이거나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연고지나 저렴한 물가가 거주지 선택의 주요한 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물가나 연고지를 고려한 이동은 특히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연고지의 경우 적응이 쉬울 뿐만 아니라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도 높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

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취업 지원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 부담 완화가 31.3%로 그 뒤를 이었으며, 문화 및 의료 인프라 확충(9.9%), 교통 인프라 개선(4.1%), 창업활동 지원(3.1%),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지원(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 청년친화지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와 맞물려있다. 결국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풍부한 문화 경험의 가능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원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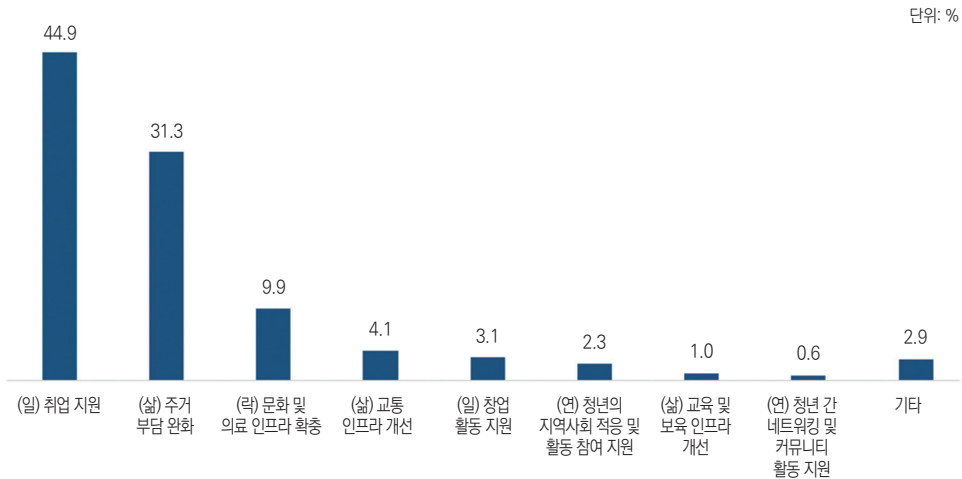
정책 설계 시 이러한 청년 수요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과 이주민 간 갈등적 요소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 기반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인맥 중심의 회사 운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거나, 이미 끈끈하게 형성된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경험은 청년들이 낯선 지역에서 배타성을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림 11〉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자료: 김지수 외(2025).

〈그림 12〉 배타적 경험에 대한 키워드



자료: 김지수 외(2025).

〈그림 13〉 비수도권 거주민과 외지인 간 갈등 요소 키워드



“서울 애들은 와서 돈만 벌고 간다라는 인식이 (지역 주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식당을 운영하지 말아 달라고 주변 상인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하겠구나’ 생각했어요.” _ 문○○, 30대

“지방에서 잠시 근무했었는데 지역사회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소속감 같은 걸 느끼기 어려웠어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 수준으로 직장 내에서도 대부분 형, 동생,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여서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_ 강○○, 30대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민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거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 지역민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는 경쟁 의식 등이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역민과 이주민 간 나타나는 이러한 갈등과 배타성은 해당 지역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안정적 정착을 저해할 수 있으며,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정서적 괴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갈등의 원만한 해소와 이주 청년들의 적응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개방적 지역 문화 조성 and 주민들 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갈등의 대부분이 일자리 즉, 경제적 기회에서 온다는 점은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에 앞서 지역 내 충분한 일자리 확보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소결 및 시사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한 번쯤은 수도권의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청년들은 다양한 경험과 일거리를 접해보고 싶으나, 비수도권에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도권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청년을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연구와 정책 경험이 보여준다. 청년들의 초기 유입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생활 기반의 안정과 문화적 만족, 지역사회 참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 이러한 경제적 기회가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의 만족도가 소속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사후관리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청년친화지수를 산출하고 청년정주 환경의 지역 간 격차를 비교·진단하였다. 청년친화지수의 분석 결과는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상위 및 열위에 있는 요소들이 상이함을 보여주며, 이는 지역 단위 청년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설정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유입-체류-정착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요소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통합적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통합적 구조 설계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필요한 요소들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소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설계하고, 지역의 상황과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행체계를 함께 구상해야 한다.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주하기 위한

청년들의 요구는 다양하다. 청년들의 복합적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복 사업의 반복적 추진을 지양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 주제어: 청년친화지수, 청년 이동, 비수도권 청년 유출



김지수

지역성장연구실 연구위원

jkim@kiet.re.kr / 044-287-3184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일-삶-락-연 기반의 청년친화지수와 정책방향」(공저, 2025)

「지역 주도의 슈퍼클러스터 구축 전략과 과제」(공저, 2023)



허문구

지역성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mungu@kiet.re.kr / 044-287-3219

「인구감소 시대 지역경쟁력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공저, 2025)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공저, 2025)



유이선

지역성장연구실 연구위원

yyoo@kiet.re.kr / 044-287-3050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추진에 따른 대학의 지역혁신허브 기능 강화 방안 연구」(공저, 2025)

「지역 균형발전의 전략적 가치와 핵심 정책의제」(공저, 2025)